

코스피	코스닥
2523.55	724.69
(-3.94)	(+0.45)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2.588	1458.50
(-0.038)	(+1.80)



‘마가 소용돌이’ 외교·안보 시험대

新 고립주의에 韓 소외 우려 확산

(MAGA)

트럼프 2기 출범

북·미 관계 속 한국의 소외 현실
방위비 분담금 압박 더욱 심화
보호무역주의로 교역 악화 전망
외교 공백 속 위기 극복 과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025년 1월 18일 토요일, 버지니아주 스타링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불꽃놀이를 보며 미소 짓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20일(현지시간) 취임하면서 4년만에 그의 시대가 다시 막을 연다. 그의 백악관 재임성이 우리에게 전례없는 긴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핵 및 방위비 문제부터 통상압력 등 국방·외교·경제 쟁점이 이미 즐비하다.

지난 2019년 6월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의 순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 내 남측 초소에서 대기해야 했다. 그 직후 문 대통령이 둘의 대화에 끼는 장면이 연출됐다. 한국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환대받지 못한 신세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판문점 동행을 애당초 바라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는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던 존 볼턴의 회고록에도 담겨 있다.

트럼프는 북한과 1대1 담판을 원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중재자 역할론은 그에게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 집권하에 남북 대화는 전무후무했다. 게다가 지금은 직무정지 상태다. 올해 상반기 새 정부가 출범한다고 가정해도 대북정책의 공백기는 길다. 그 사이 한반도문제 관련 트럼프의 선제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미국이 한국의 대통령 직무대행 등을 정식 외교 상대로 마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트럼프의 재집권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도 직결된다. 지난해 10월 미 대선전이 한창일 때 트럼프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한국이 연 100억 달러(14조5000억 원)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한국을 ‘머니머신’이라 칭했다. 앞서 오는 2026년도분으로 책정된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은 1조5192억 원이다. 여기에서 무려 95% 인상된 돈을 내라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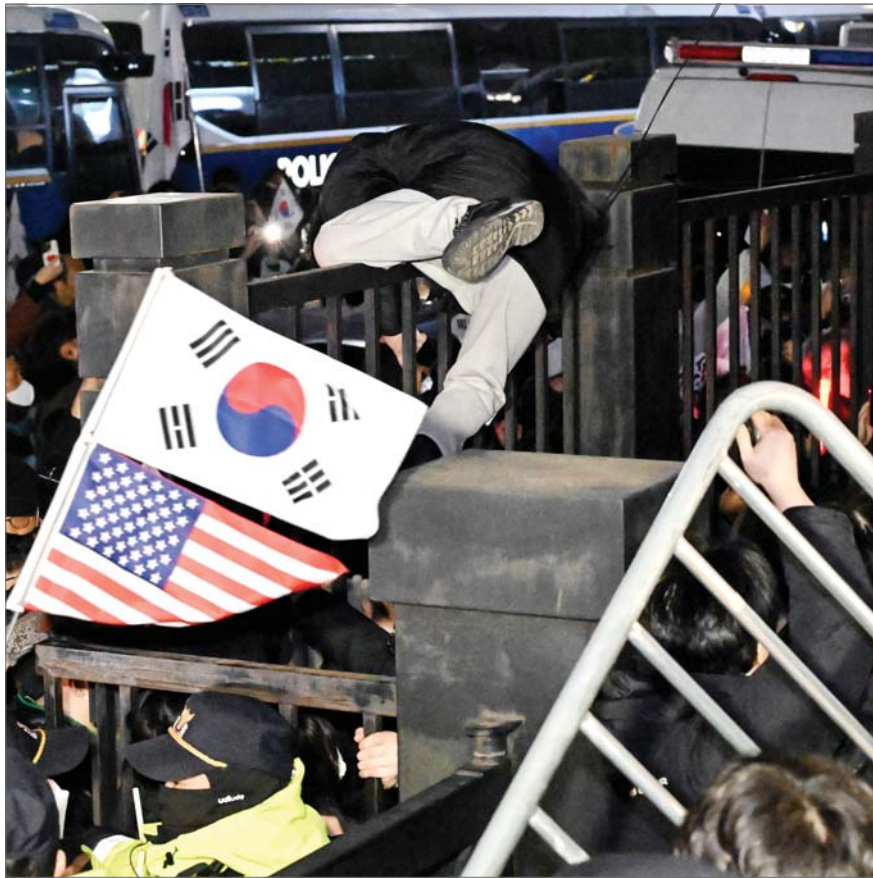
물론 타협을 위한 협상에 돌입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현재의 국방부·외교부·기획재정부 등은 윤 대통령 탄핵 및 수사 국면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국가안보 균열에다 막대한 금전적 손실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이른바 ‘코리아 패싱’(한국 소외) 우려는 트럼프가 이면에 내세우는 ‘신(新)고립주의’와 맞닿아 있다. 공화당 전통의 외교정책인 ‘미국 고립주의’를 잇고 있다. 국가 간 동맹이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앞세워 미국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신 고립주의는 다소 다르다. 미국이 지구촌 경찰 노릇을 언제까지 도맡아야 하나며 각국에 방위비 분담 확충 요구를 들먹인다.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회원국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비중을 현재의 2%에서 3.5% 수준까지 올리라고, 취임 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100여 년 전의 고립주의를 내심 표방하면서도 자국우선주의가 새로 녹아들어 있다.

한편,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는 17일(현지시간)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온라인 대담 ‘캐피털 케이틀’에 출연해 “한국이 지렛대를 쥐고 있다고 본다”며 미군 철수·재배치 등은 트럼프로서도 선불리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3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어가고 있다. /뉴시스

현직 대통령 첫 구속 ‘불명예’

공수처·檢 조사 후 기소 전망

서부지법 “피의자 증거 인멸 우려”
尹대통령 측 구속적부심 청구 전망
지지자들 불법·폭력 습격 사태도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얻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조사를 받은 후 내달 기소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내달 탄핵심판 최종 결론 시기와 맞물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범죄의 중대성 여부,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이 빠르게 수사를 받았고,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본 셈이다.

또 내란 혐의는 최대 사형, 최소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영장청구서에 체포영장 집행과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에 협조를 하지 않아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발부에 불

복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체포 이후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변호인단은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더라도 영장 발부를 번복할 만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시간 끌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후 극렬 친윤(친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불법·폭력적으로 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구속적부심에서 불리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향후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20일에는 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 등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혐의 피의자 조사를 각각 10일씩 나눠서 하기로 한 바 있어,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조사를 받은 후 2월 초 검찰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가 끝나면 내달 중순 이후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될 전망이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가 내달 중순까지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지정한 상황이라, 탄핵심판 결론이 날 때쯤 형사 재판 절차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이 탄핵심판 결론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서예진 기자 syj@**

회복까지 18년… ‘대외신인도’ 사수 총력

최상목, 거시경제 금융 간담회서
견고한 한국경제 적극 설명 당부

1997년 1월 한보그룹이 무너졌다. 한보주채와 한보철강 등 사업확장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킨 결과였다. 한보그룹의 부도는 기아, 쌍방울, 해태그룹의 부도로 이어졌고, 금융업계는 손쓸새 없이 손실을 입었다. 신용평가기관인 S&P에 이어 무디스(Moody's) 등은 줄지어 신용도(대외신인도)를 내렸고, 환율은 끝없이 올랐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시작이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열린 거시경제·금융 현안간담회에

서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는 등 각 기관에서 국제사회에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fundamental·전반적인 경제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시경제·금융 현안간담회는 경제와 금융, 통화당국 수장들이 모이는 자리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정치적 불안정이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달라는 설명이다.

◆ 대외신인도 회복까지 18년

최 권한대행이 대외신인도에 민감한 이유는 한 번 떨어질 경우 회복하는데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재 S&P, 무디스, 피치 등 3대 글로벌 신용사는 우리나라를 선진국 수준인 AA, Aa2, AA-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등급을 받은 기간은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신용등급(피치 기준)은 AA-에서 B-로 12단계 하락했다. 이후 한국은 2001년 IMF 구제금융조치를 졸업했지만, 신용등급은 2015년 회복됐다. 회복되기까지 약 18년이 걸린 셈이다.

대외신인도는 외부에서 우리나라의 기업 또는 국가를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대외신인도를 평가하는 대표적 척도는 국가신용등급이다. **〈2면에 계속〉**

/사유리 기자 yul115@



▲ 5·18 단체,尹 구속에 “헌법·민주주의 유린한 인과응보”
▲ 외신,尹 구속영장 발부 긴급 타전… “현직 대통령 처음” **〈사진 뉴시스〉**

▲ 오세훈 “한 지도자의 무모함에 참담… 이제 개헌 논의하자”
▲ 여야 방미단, 이번주 트럼프 취임식 참석… 탄핵 정국 와중 의원 외교

▲ 여, 제주항공 참사 추모공원 설치에 “재발방지 노력이 먼저”
▲ 학생 정치참여 확대한다더니… 전국 고교 73곳 ‘퇴학’ 규정 그대로